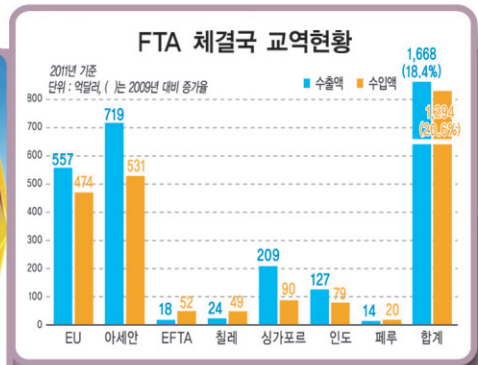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송유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contents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005	I. 들어가며
013	II. FTA의 의미와 효과
14	1. FTA의 정의
17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23	3. FTA의 효과
029	III. FTA와 주변국과의 관계
30	1. 한국과 미·일 관계
34	2. 한국과 중·러 관계
38	3. 북한과 미·일 관계
44	4. 북한과 중·러 관계
051	IV. FTA와 남북관계
52	1. 경제적 측면
58	2. 정치·안보적 측면
063	V. FTA의 통일에의 활용방안
64	1. 통일비용
68	2. 개성공단
75	3. 남북한 FTA
083	VI. 맺음말
089	참고문헌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CHAPTER 0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11년 연간 무역 1조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후 63년 만에 또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 등 8개 국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식민지를 경영한 제국주의 국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무역 1조 달러를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이다. 1948년 1,9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수출규모는 2011년 5,150억 달러로 2만 7,000배 증가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못사는 나라의 하나로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수단 또는 카메룬 같은 국가들보다도 뒤떨어지는 세계 100위 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출규모 세계 7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또한 동 기간의 수출 통계가

파악되는 전 세계 13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품목에 있어서도 1960년대 초반 철광석과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 오징어 정도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가발, 섬유, 합판, 신발 등의 경공업 수출을 실시하던 1970년대를 거쳐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제품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수입을 포함한 무역규모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1962년 세계 65위 수준이었던 4억 7,800만 달러에서 2,000배 이상 증가한 세계 9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국민소득 측면에 있어서도 1962년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비해 국민소득이 200배 이상 증가한 2011년 2만 759달러로 급증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후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종전에는 우리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던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선망이 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의 원조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일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없지만, 필리핀에서는 종전에 자국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자기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존경을 보내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는 무역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다시 말해 한국의 세계 유래 없는 경제발전에 있어 무역은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무역이었다. 대한민국을 국가부도 상태에 빠트렸던 IMF 외환위기도 발생한 이후 5년간 94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금융 부문 부실로 발생하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나라는 이후 3년간 1,1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거두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 탈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렇듯 무역은 우리나라

그림 1. 1960년대 서울과 현재 서울



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었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면 무역의 발전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국가간의 합종연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만 하였으며, 그 중 하나의 대안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그러나 FTA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계층에서는 FTA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 환경의 조성에 있어서의 FTA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연령이 적을수록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수준은 40대가 가장 높고(34.6%), 20대가 가장 낮게(22.9%)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문제(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등)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도 4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무관심한 응답자 역시 20대가 가장 많고(10.8%), 40대가 가장 적게(5.7%)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을 ‘지원 및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도 40대가 가장 많고(70.7%) 20대가 가장 적다(54.6%). 반면에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20대가

가장 많고(26%), 40대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66.6%)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2009년도(70.3%)에 비하여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단지 17.1%만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한민족(21.5%)이란 답변보다는 국력 강화(29.7%)를 첫 번째로 꼽았다. 반대로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사회혼란(47.5%)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25.8%)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FTA라는 경제문제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FTA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FTA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FTA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주변 4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관계 그리고 이들 국가와 북한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FTA추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설명되게 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FTA와 남북관계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안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 V장에서는 개성공단이나 남북한 FTA 등의 통일에의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 제 VI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CHAPTER 02

FTA의 의미와 효과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3. FTA의 효과

1. FTA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RTA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 간의 관세를 없애는 것에 추가하여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도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란 미국과 한국 간의 관

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회원국이 아닌 중국에 대해서는 두 나라 각자가 갖고 있는 무역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한미 관세동맹이 맺어졌다고 하면 한미 양국이 비회원국인 중국에게도 서로 같은 무역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란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서 발전하면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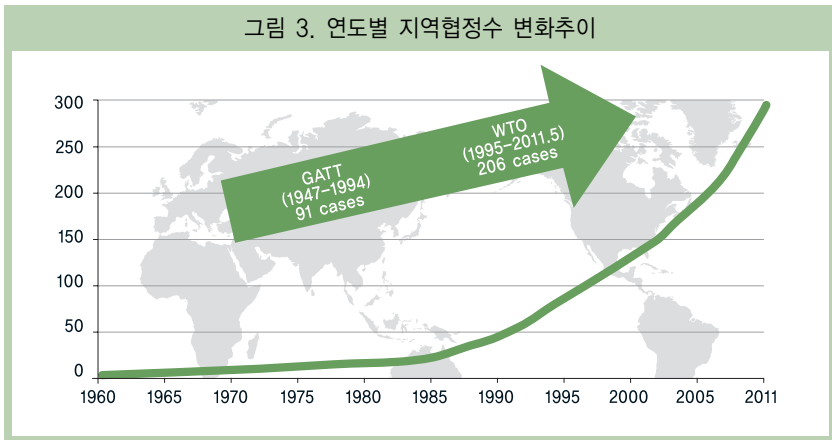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단일시장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사실 FTA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기본원칙인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의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 규범은 ①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②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③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FTA를 통해 회원국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면 이는 전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다시 말해서 FTA가 무역자유화의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의견도 있다. FTA는 회원국 간의 무역만을 증대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무역은 감소하게 되어 FTA가 무역자유화의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림 3. 연도별 지역협정수 변화추이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011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에는 51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만들어져 WTO에 통보되었으며 그 중 319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발효시킨 1995년 이후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53개의 WTO회원국 거의 전부가 하나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대표되는 국제다자무역 체제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외국의 교과서나 각종 논문에서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의 확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경제 질서를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은 바가 있었으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 오히려 WTO가 출범한 이후 지역주의의 추세는 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WTO의 역할이 예상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잘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또는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지역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먼저 1992년 EU가 출범하고 그 회원국의 수가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¹⁾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종전에는 지역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에 따라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FTA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1) 2011년 말 현재 EU의 회원국은 27개 국가이다.

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국이 다른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 상품은 경쟁국의 상품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시장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제품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개척을 위해서는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한국의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 있다. 이제까지 한국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을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이며 공세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와 이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정부는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주의를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1999년 칠레와의 FTA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한국은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FTA 추진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을 단기간에 실시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는 내용면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FTA가 다루고 있는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와 더불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FTA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이 WTO에서 정한 상품과 서비스 관련 개방 및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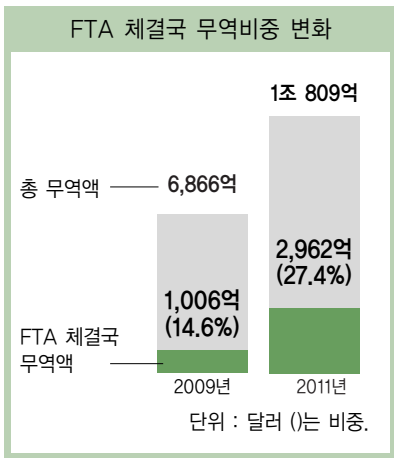
그림 4. 발효된 FTA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Nations: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특히 최근에는 2011년 7월에는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고 2011년 8월에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다. 미국과의 FTA는 2007년 6월에 협정에 서명하였고, 2011년 2월에 추가협상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2011년 11월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현재 한-미 FTA 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2012년 상반기에는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UAE, 바레인),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일본, 중국, 한중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러시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SACU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

드), 베트남, 몽골,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FTA에 관해 공동연구 중이거나 또는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자료 관세청

전 세계적으로 FTA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 교역에서 FTA 체결국 간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기준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곧 발효될 예정인 미국을 포함하면 35%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FTA 추진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의 실제적인 FTA 교역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한국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FTA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모두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또한 아세안과의 FTA를 통해 아시아지역에, 칠레 및 페루와의 FTA를 통해 남미지역에도 FTA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상태로서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유리한 FTA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정부는 이러한 거점 지역에 대한 FTA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지역에 대한민국의 시장 확보를 위한 FTA를 체결하여 우리나라를 FTA 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무역환경을 보다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FTA 추진 전략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FTA의 효과

FTA는 많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먼저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교역에 있어서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창출 효과란 FTA 체결 이전에는 관세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던 물건이 새

로이 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환 효과란 다른 국가로 부터의 무역이 FTA회원국과의 무역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FTA로 인해 무역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더라도 <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당 수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표 1. 한국의 FTA 체결 후 교역량 변화 추이

(단위: 백만\$)

국 가	분 류	발효 1년전	발효 1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발효 5년차	발효 7년차
칠레 (04.4)	수출	524	708	1,556	3,115	3,032	2,947
	수입	1,328	1,934	3,813	4,184	4,127	4,221
	교역액	1,852	2,642	5,379	7,299	7,159	7,168
	무역수지	-804	-1,226	-2,247	-1,069	-1,095	-1,274
싱가포르 (06.3)	수출	7,407	9,489	16,293	13,617	15,244	-
	수입	5,318	5,887	8,362	7,872	7,850	-
	교역액	12,725	15,376	24,655	21,489	23,094	-
	무역수지	2,089	3,602	7,931	5,745	7,394	-
EFTA (06.9)	수출	1,730	1,123	1,956	3,522	-	-
	수입	2,192	3,554	4,548	5,699	-	-
	교역액	3,952	4,667	6,504	9,221	-	-
	무역수지	-465	-2,431	-2,592	-2,177	-	-
ASEAN (07.6)	수출	32,066	38,749	40,979	53,195	-	-
	수입	29,743	33,110	39,053	44,098	-	-
	교역액	61,809	71,859	75,032	97,293	-	-
	무역수지	2,323	5,639	1,923	9,097	-	-
인도 (10.1)	수출	8,013	11,435	-	-	-	-
	수입	4,142	5,674	-	-	-	-
	교역액	12,155	17,109	-	-	-	-
	무역수지	3,871	5,761	-	-	-	-

자료 외교통상부(2011),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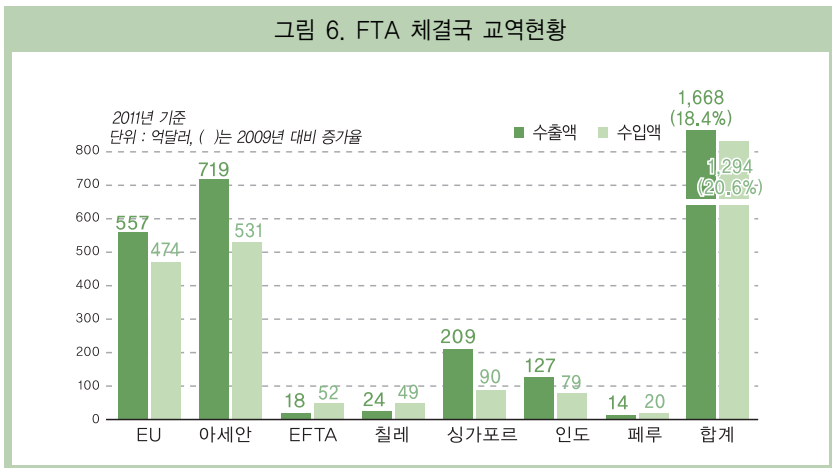
FTA도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주요 수입품인 구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하며 한-EFTA FTA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필요한 기계류의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FTA는 국내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출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생산단가가 낮아지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제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종전에는 관세로 인해 수입될 수 없었던 FTA 회원국의 제품이 수입되게 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FTA에는 외국인 투자의 증대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는 상품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내지 않고 통관하게 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 등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에 외국인 투자가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도입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전반에 걸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FTA는 외국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이 동일한 환경하에서 경쟁하게 만들게 되어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이나 시장의 확보에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경쟁의 도입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국내시장을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수출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FTA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일부 기업이나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국내의 보호막이 사라짐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러한 계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FTA의 실시와 더불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과 산업별경쟁력 강화정책 및 피해계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관세청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CHAPTER 03

FTA와 주변국과의 관계

1. 한국과 미·일 관계
2. 한국과 중·러 관계
3. 북한과 미·일 관계
4. 북한과 중·러 관계

FTA와 주변국과의 관계

1. 한국과 미·일 관계

한국과 미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발효시킨 바 있으며 일본과의 FTA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와의 FTA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한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데에는 경제적 이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정치·경제적 이유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즉 한-미 FTA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종전의 한미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매우 발전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며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관계는 더

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경제관계의 심화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남북간의 긴장심화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경제이익 보호를 위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나 한국과 북한관계의 진전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입장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FTA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FTA의 체결은 회원국 간 직접투자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로 인해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급증한 바도 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대하게 된다면 미국은 자국기업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더욱 바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1990년대 후반에 경험한 바 있는 외환위기를 다시 겪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원하게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을 위한 기초경제력을 유지하기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 FTA는 한반도 통일환경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

지 확대시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거나, 북한산 부품을 사용한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난다면 북한은 우리나라나 미국 등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북한은 남북간 협력을 위한 노력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결국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이 미국, EU 등의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은 그 동안 중단하고 있던 한-일 FTA에 대한 실무자급의 논의를 재개하여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ASEAN 전체와의 협정, ASEAN 개별 7개 대상국과의 개별협정, 칠레, 인도, 멕시코, 스위스 등과의 협정도 맺고 있다. 일본은 FTA 보다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방에 따른 일본의 농어분야에 대한 피해 우려 때문이다. 한국과의 FTA 협상이 중단된 이유도 일본의 농업 개방 폭에 대한 한국측의 불만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조속한 시일 내의 FTA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이 이미 추진하여 체결하고 있는 여러 FTA로 인해 일본은 전통적으로 무역수

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시장을 한국의 FTA대상국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FTA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FTA 체결 움직임에 대응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에의 공식참여를 선언하였다. TPP는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농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협정에의 일본의 참여의사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언론에서도 동 협정에 대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그 동안 한국에 뒤쳐져 있던 FTA 속도를 일시에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TPP가 완성되면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탄생한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 등 10개국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TPP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TPP는 10개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다자간 FTA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협상참여

국의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주도하는 사실상의 미-일 FTA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FTA정책에 있어서 TPP에 참여할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일본과 미국이 참여하는 TPP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고 일본과의 FTA에 대한 기초연구는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TPP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과 중·러 관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간의 2011년 교역규모는 1992년 대비 약 35.6배 증가하여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1992년 당시 중국은 교역규모로 한국의 수출대상국 중 6위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2위로 부상한 이후 2004년부터 중국은 한

국의 제1위의 교역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교역량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2,200억 달러 수준으로 2위인 일본의 1,080억 달러와 3위인 미국의 1,007억 달러의 두 배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²⁾ 또한 한국은 1992년을 제외하고 중국과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452억 6,4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은 24.1%, 수입은 16.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교 초기인 1992년의 수출 3.5%, 수입 4.6%와 비교하면 매우 급속한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투자측면에서도 중국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2의 투자 대상국이다.(FDI 투자액: 미국 4,328억 달러, 중국 2,922억 달러, 호주 1,066억 달러) 이는 지난 20년간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21배 증가한 것이다.³⁾

한국과 중국은 양국간 FTA체결에 관한 기초 연구단계를 종료하고 곧 협상을 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과의 FTA는 미국과의 FTA보다 더 큰 효과를

2) 교역 총량 뿐만 아니라 수출과 수입을 나누어 보더라도 중국은 2011년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수출량(백만 달러, 11년) : (중국) 134,205, (미국) 56,203, (일본) 39,713, 수입량(백만 달러, 11년): (중국) 86,426, (일본) 68,302, (미국) 44,567

3) 지난 20년간 중국의 對한국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나 비중 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표 2. 한국의 대중, 대러시아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중국				러시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92년	2,653,639	164.7	3,724,941	8.3	118,084	-	74,830	-
93년	5,150,992	94.1	3,928,741	5.5	601,171	409.1	974,821	1,202.7
94년	6,202,986	20.4	5,462,849	39	961,911	60	1,229,652	26.1
95년	9,143,588	47.4	7,401,196	35.5	1,415,881	47.2	1,892,880	53.9
96년	11,377,068	24.4	8,538,568	15.4	1,967,534	39	1,810,266	-4.4
97년	13,572,463	19.3	10,116,861	18.5	1,767,932	-10.1	1,534,783	-15.2
98년	11,943,990	-12	6,483,958	-35.9	1,113,846	-37	998,579	-34.9
99년	13,684,599	14.6	8,866,667	36.7	637,052	-42.8	1,590,469	59.3
00년	18,454,540	34.9	12,798,728	44.3	788,127	23.7	2,058,265	29.4
01년	18,190,190	-1.4	13,302,675	3.9	938,161	19	1,929,476	-6.3
02년	23,753,586	30.6	17,399,779	30.8	1,065,875	13.6	2,217,604	14.9
03년	35,109,715	47.8	21,909,127	25.9	1,659,119	55.7	2,521,780	13.7
04년	49,763,175	41.7	29,584,874	35	2,339,329	41	3,671,455	45.6
05년	61,914,983	24.4	38,648,243	30.6	3,864,170	65.2	3,936,623	7.2
06년	69,459,178	12.2	48,556,675	25.6	5,179,248	34	4,572,967	16.2
07년	81,985,183	18	63,027,802	29.8	8,087,746	56.2	6,977,477	52.6
08년	91,388,900	11.5	76,930,272	22.1	9,747,957	20.5	8,340,060	19.5
09년	86,703,245	-5.1	54,246,056	-29.5	4,194,066	-57	5,788,759	-30.6
10년	116,837,833	34.8	71,573,603	31.9	7,759,836	85	9,899,456	71
11 1-11	122,513,107	15	79,578,212	22	9,481,302	47.7	9,887,119	6.2

자료 www.kita.net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북한에의 중국의 편중을 완화하는 효과 역시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는 FTA가 체결되면 더욱 더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간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간의 의존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량도 <표 2>에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중국과의 교역량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의 증가량은 1992년에서 2011년 사이에 100배 이상 늘어나 중국과의 교역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12번째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거대한 내수시장, 현대화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교역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는 2009년 기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며 철광석, 목재 등의 기타 자원도 풍부하게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면적은 세계 1위, 인구수는 세계 9위, 경제규모는 세계 11위권의 대국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보완할 수출시장이며 지리적으로도 독립국가연합(CIS)이나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일 후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물류 허브로서 남북한과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FTA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FTA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러시아 측은 상당 수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FTA가 체결된다면 한-러 경제협력은 강화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의 협조도 심화될 수 있어 통일에도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과 미·일 관계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에서 제조된 완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 외에 제3국을 통해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미국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 무역 제재 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먼저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에서는 수입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등은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의 수입면허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개성공단제품도 한-미 FTA의 특혜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북한산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 협상 시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으므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즉 한-미 FTA 발효 1년 후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을 개최하여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기준은 ①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근로 기준 및 관행, 임금, 경영 및 관리 관행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OPZ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 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으며 개성공단 이외 다른 북한 지역도 OPZ로 선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며,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요인 또한 존재한다. 먼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견해도 있다. 현재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미국의 통상법 제4조(Title IV of Trade Act of 1974)의 규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상법 제4조 대상국에서 제외시키거나 북한과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우리가 FTA 체결 대상국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설득시키고 북한의 의미 있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WTO 규정을 원용하여 수입품에 대해 관세, 세금 등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수량제한조치(Quantitative Prohibition or restriction)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북한 등 역외국의 부품을 사용한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시 한국 제조업체들이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일정 비율 이하의 역외산 부품을 사용하여 만든 최종생산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북한산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북한산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최종제품에 포함된 북한산 부품 수입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 FTA는 북한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지난 4년 동안 미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없는 상황이었고 2010년에도 대부분이 우표 위주의 예술품 수출이 8,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수입도 원조 및 공여와 더불어 일부 곡물, 식용과실 및 견과류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들이 완화되고 북한산 부품의 대한 수입이 증가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교역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북한의 대미 교역현황

(단위: 1,000달러)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수출	0	0	0	8
수입	1,728	52,151	903	1,931
합계	1,728	52,151	903	1,939

자료 KOTRA(2011), 201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일본은 중국에게 제1의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물려주었던 1996년 이전까지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었다. 또한

1996년에 중국과 일본의 교역의 합은 북한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교역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핵문제 등이 일본 내에서 대두되어 일북간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이에 따른 냉각기류가 경제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와 조총련계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섬유, 전자제품 등의 위탁가공 교역의 부진으로 인하여 2002년도엔 일본의 북한교역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을 16.3%로 떨어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 중에 있다. 일본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10.9) 직후인 2006년 11월에는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고급식재료 및 귀금속 등 사치품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발령했으며, 제2차 핵실험 실시(2009.5.25) 및 일본인 납치문제를 이유로 2009년 6월부터는 일용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북한 수

표 4. 북한의 대일 교역현황

(단위: 1,000달러)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수출	0	0	0	0
수입	9,311	7,664	2,722	0
합계	9,311	7,664	2,722	0

자료 KOTRA(2011), 201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본과 북한의 교역은 거의 없으며 2010년 이전에는 일본의 북한으로 수출은 미미한 금액이나마 명목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일본과 북한의 교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일본과 북한의 교역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내용을 살펴보려면 양국간의 교역이 활발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 전기전자제품 및 섬유제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의 일본산 제품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제품과 전기전자부품의 수입 및 차량, 곡물, 중유가 주로 수입되었다. 아직 한일간의 FTA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FTA가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해결된다면 향후 급속히 개선될 여지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FTA 추진시 기존의 일본과 북한 간의 교역구조를 감안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북한과 중·러 관계

2011년 10월까지의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약 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하였고 2011년 전체로는 60억 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09년 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3년도에 10억 달러를 초과하기 시작한 이후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강화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주변국과의 교역이 감소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100억 달러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북중간 교역의 특성은 2011년에는 그 폭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수지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전체교역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최대교역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은 원유, (기타)디젤화물차량, 경디젤유, (기타)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질소비료 등으로 이들 상위 5대 품목 수입액이 2011년 1월에서 7월까지 6억 9,896만 7,910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6.7%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무연탄, 철강 및 그 정광, 비합금선철, 인조섬유제 남성용 방한·방풍복, 비합금 아연 등으로 상위 5대 품목의 수출액이

표 5. 중국의 대북한 교역 추이

(단위: US 1,000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수출입 총액 (증감률)	무역수지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8	356,716	-	51,089	-	407,805 -	305,627 -
1999	328,634	-7.9	41,722	-18.3	370,356 (-9.2)	286,912 (-6.1)
2000	450,839	37.2	37,214	-10.8	488,053 (31.8)	413,625 (44.2)
2001	570,660	26.6	166,797	348.2	737,457 (51.1)	403,863 (-2.4)
2002	467,309	-18.1	270,863	62.4	738,172 (0.1)	196,446 (-51.4)
2003	627,995	34.4	395,546	46.0	1,023,541 (38.7)	232,449 (18.3)
2004	794,525	26.5	582,193	47.2	1,376,718 (34.5)	212,332 (-8.7)
2005	1,084,723	36.5	496,511	-14.7	1,581,234 (14.9)	588,212 (177.0)
2006	1,231,886	13.6	467,718	-5.8	1,699,604 (7.5)	764,168 (29.9)
2007	1,392,453	13.0	581,521	24.3	1,973,974 (16.1)	810,932 (6.1)
2008	2,032,431	46.0	760,413	30.2	2,792,844 (41.3)	1,272,018 (57.3)
2009	1,886,916	△7.2	792,548	4.2	2,679,464 (△4.1)	1,094,638 (△13.9)
2010	2,278,451	20.7	1,193,372	50.6	3,471,823 (29.6)	1,085,079 (55.9)
2011. 1~10	2,621,462	47.2	2,052,185	124.8	4,673,647 (73.5)	569,277 (△34.4)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2011). 금년도 북중 교역 사상최대전망

8억 6,124만 2,858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5.3%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의 외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 감면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동 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기업 소득세율은 14%로 중국지역의 특구 15%, 홍콩 18%, 싱가포르 26%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중국자본의 유입을 위해 북한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 규칙’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기업에는 기업이익이 발생 하는 해부터 5년간 기업 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간 50% 감면(5면 3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10년 이상 운영한 생산 부문의 외국 기업에는 역시 이익이 발생 하는 해부터 3년 면세, 2년간 50% 감면(3면 2감)이, 투자 규모가 3천만 유로 이상인 외국 기업에는 4년 면세, 3년 감면(4면 3감) 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은 기업 소득세 뿐만 아니라 영업세와 교역세도 포함되지만 재산세는 비생산용 고정자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건설사업 촉진을 위해 직접 건설 또는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 경우, 준공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이 저조하자 압록강 지역의 황금평과 위화도 지역을 단동시에 50년의 임대를 허가 하고 이를 10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결정했고,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구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최근 황금평과 위화도의 협력 개발은 단동 동측의 변경경제협력구에 귀속되어 관리

되며 협력구는 구체적인 협력개발을 위해 양 섬에 개발사무실을 설치하였다. 황금평경제구는 홍콩 신형지국제그룹(香港新恒基國際集團) 등 민영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도록 결정되었으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80%는 중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중국은 단둥과 인접한 압록강의 두 자유무역지구에서 임대 의 형식으로 중국의 두 기업과 개발을 진행하며 중국기업의 투자 규모는 황금평이 5억 달러, 위화도가 3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단둥의 종합 후방기지는 국가급 경제구 관련절차에 따라 중국 상부에 보고된 상태이며 상무, 물류와 수출상품 가공을 담당하며 황금평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시설재료, 전력에너지와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 동북부와 북한 간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이후 심화된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북 3성의 노후화 된 공업기지를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지로 육성하여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3년 동북진흥계획을 국가 공식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은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체제의 안정적인 유지와 경제회생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 경제 활성화가 자국의 국경지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활성화로 북한의 붕괴를 막고자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과의 새로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여 북한제품의 중국시장 접근을 돕고, 북한에 위치한 항만을 중국이 활용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철수 여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도 있다. 하지만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경제를 개방시키는 조건으로 투자, 무역 지원 약속하는 방안으로 종전의 태도에서 전환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북한이 한국에의 흡수통일 되는 것을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할 때에나 기존의 FTA를 활용할 때 북한의 경제자유지대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통일 기반의 마련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2010년에 교역규모가 1억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80% 정도 증가하여 북한의 2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전체 교역규모의 2.6%에 불과하여 그 규모나 비중 측면에서는 중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철강, 토석류/소금, 전기기기/TV/VTR, 보일러/기

계류, 선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강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타 4대 품목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 수입품은 항공기, 광물성연료/에너지, 목재/목탄, 보일러/기계류, 지/판지의 순이다. 수입 상위품목은 전 품목에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전년에는 거래가 없던 항공기류가 1위로 부상하였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구성은 향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역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아직 한국과 러시아 간의 FTA는 여건조성 단계에 불과하여 한국의 FTA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향후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FTA를 추진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CHAPTER 04

FTA와 남북관계

1. 경제적 측면
2. 정치·안보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북한은 대외무역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교역대상국들이 발표하는 북한과의 교역량을 합산하면 대략적인 북한의 교역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수출은 전년대비 42.4% 증가한 15억 1,000만 달러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26억 6,000만 달러 기록하였다.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의 급증과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의 증가로 인해 총 교역규모는 41억 7,000만 달러로 2009년 대비 22%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11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1990년 이후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표 6.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합계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90	1,773	-	2,437	-	4,170	-	-704
1991	945	-45.5	1,639	-32.7	2,584	-38.0	-694
1992	933	-1.3	1,622	-1.0	2,555	1.1	-689
1993	990	6.1	1,656	2.1	2,646	3.6	-666
1994	858	-13.3	1,242	-25.0	2,100	-20.6	-384
1995	736	-14.2	1316	6.0	2,052	-2.3	-580
1996	727	1.2	1,250	-5.0	1,977	-3.7	-523
1997	905	24.5	1,272	1.8	2,177	10.1	-367
1998	559	-38.2	883	-30.6	1,442	-33.8	-324
1999	515	7.9	965	9.3	1,480	2.6	-450
2000	556	8.0	1,413	46.4	1,969	33.0	-857
2001	650	16.9	1,620	14.6	2,270	15.3	-970
2002	735	13.1	1,525	-5.9	2,260	-0.4	-790
2003	777	5.5	1,614	5.9	2,391	5.8	-837
2004	1,0220	31.3	1,837	13.6	2,857	19.5	-817
2005	998	-2.1	2,003	9.1	3,002	5.1	-1,005
2006	947	-5.2	2,049	2.3	2,996	-0.2	-1,102
2007	918	-3.0	2,022	-1.3	2,941	-1.8	-1,104
2008	1,130	23.0	2,686	32.7	3,816	29.7	-1,556
2009	1,063	-6.0	2,351	-12.4	3,414	-10.5	-1,288
2010	1,513	42.4	2,660	13.2	4,174	22.2	-1,147

자료 KOTRA(2011), 201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북한은 1990년 이후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만성적인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 품목인 광물성 생산품, 섬유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0년 최대 수출품목인 광물성생산품의 수출이 56.1% 증가하였으며 섬유제품, 비금속류, 기계·전기전자류도 50%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제품군, 귀금속류, 목제품 등은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전체 교역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각 년도 별로 지표의 부침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향후 북한의 교역구조에 어떤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지를 예측하는데 하나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수입측면에서는 원유, 플라스틱, 기계/전기전자, 차량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특히 2010년 원유 등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은 55% 증가하며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플라스틱 제품, 기계/전기전자류는 전년대비 각각 27%, 40% 증가하였으며 차량류는 71% 증가하며 2억 1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유지/제조식료품은 30% 감소하여 1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의 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무역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90% 정도가 아시아와 대양주에 편중된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2010년 북한의 교역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은 전체 교역의 0.4%, 미주지역은 3%에 불과하며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를 합쳐도 6% 수준정도이다. 특히 2010년에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

가 8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대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수출품의 구성은 품목별 점유 비율이 광물성생산품(46.0%), 비금속류(17.5%), 섬유제품(15.2%), 기계·전기전자(6.5%), 화학플라스틱(5.8%), 기타(9%) 순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개성공단 등의 위탁가공을 통해 제조업 위주의 수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1차 산업 생산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입구조 역시 전년도와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 구성 비율은 광물성 생산품(20.6%), 기계·전기전자(18.1%), 섬유제품(12.3%), 기타(8.9%), 차량(8%), 동식물성 제품(7.5%) 등의 순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품목별 비중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수입구조에서 보면 북한은 원자재, 공업 완성품, 에너지·식량 등을 주로 수입하는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교역규모는 2009년 감소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남북간 총 교역액은 19억 1,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9% 증가한 16억 7,900만 달러였다. 북한에 대한 반출은 전년대비 16.6% 감소한 8억 6,800만 달러였지만, 북한으로 부터의 반입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10억 4,4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등 다른 일반교역들이 감소

하는 가운데에도, 개성공단사업은 53.3% 증가하며 전체 교역규모의 증가를 개성공단이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북간의 상업적 거래는 전년대비 15.1% 증가한 18억 8천만 달러수준이지만 정부 및 민간지원이 크게 감소하여 비상업적 거래는 전년대비 37.8% 감소한 2,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간의 반출입 품목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한국의 주요 반입 품목은 섬유류(49.4%), 전자전기제품(2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은 전년대비 각각 339.9%, 64.2%의 증가율로 대폭 늘어난 반면,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56.3%, 79.7%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주요 반출 품목은 섬유류(39.8%), 전자전기제품(28.8%), 기계류(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산물과 섬유류의 반출은 전년대비 각각 31.5%, 28.6% 늘어난 반면 철강·금속제품과 기계류는 각각 31.8%,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무역동향을 정리하면 중국과의 무역편중도 심화, 한국과의 교역 중 개성공단의 비중 증가가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TA의 통일 활용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를 확대해 나갈수록 남북간 교역규모의 차이는 심화될 것이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남북간 경제 수준의 격차로 인하여 통일

과정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TA를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현재 한국이 체결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FTA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수출증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산 제품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수입규제는 북한의 경제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북한산 제품의 수출방법 모색은 남북경협을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산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을 만들어 FTA 대상국에 수출을 하는 것 역시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FTA를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활로의 모색은 국가경제력을 향상시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FTA를 북한경제의 개선지원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안보적 측면

정치·안보적 효과는 우리나라의 FTA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먼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ASEAN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역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ASEAN이 주도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여해왔다. ARF는 1994년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내 유일의 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ARF는 2000년 7월 북한이 가입하여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하여 동북아 중심(Hub)국가 정책을 추구하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데 전략적으로 ASEAN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ASEAN FTA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ASEAN은 북핵 문제를 ARF에서 다루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 의사를 가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ASEAN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한-ASEAN FTA를 통한 한국과 ASEAN의 경제협력 강화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의 전통적 동맹관계는 경제관계의 심화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미

국은 한-미 FTA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한반도의 안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위험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의 경제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이외의 다른 주요국과들의 FTA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공고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FTA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심화되면 북한에 대한 한반도 안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쉬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한-중 FTA도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과의 FTA는 단지 경제적인 효과만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남북한 문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은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북한체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나 탈북자에 대한 논의 등을 중국과 추진하여야 할 때 한중간의 경제채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중 FTA로 강화될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북한은 경제적 희생을 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한-중 FTA를 한-중-일 FTA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

하면 한-중 FTA는 한-중-일 FTA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의 달성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 이제까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일방적인 북한 지지를 완화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개방도가 낮은 북한에게 별다른 경제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여도 심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구소련 및 공산권의 붕괴와 한국과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로 인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으며 그 이후 일부분 개혁·개방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중 FTA도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FTA에 있어서의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OPZ)를 활용하여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2011년말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4만 9,800여명과⁴⁾ 그 가족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효과는 정

4) 3단계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2020년에 완료되면 35만 명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4인 가족으로 치면 약 140만 명이 자본주의 경제에 노출되게 될 것임.

그림 7. 개성공단 생산현장



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 인력은 향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기초인력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

단내 업무수행을 위하여 남북의 인력이 공동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해 상호간의 이질감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사회문화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FTA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제고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제고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의 한반도 내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심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CHAPTER 05

FTA의 통일에의 활용방안

1. 통일비용
2. 개성공단
3. 남북한 FTA

1. 통일비용

2010년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6배의 차이에 불과하던 남북간의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차이는 2010년 19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무역총액 역시 동 기간 32배에서 214배의 차이로 그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 이외의 발전용량, 자동차 생산대수, 조강이나 시멘트 및 비료 생산량이나 도로 총연장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면 될수록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비용(소위 말하는 통일비용)을 증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정부나 민간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수입금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남북

표 7. 남북한 경제비교(1990-2010)

항목	구분	단위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 GNI	남한	만원	446	1,277	1,796	1,884	2,016	2,128	2,195	2,400
	북한	만원	81	86	108	151	107	117	119	124
무역 총액	남한	억\$	1,3496	3,328	5,457	6,349	7,283	8,573	6,866	8,916
	북한	억\$	41.7	19.7	30.0	30.0	29.4	38.2	34.1	41.7
수출	남한	억\$	650	1,723	2,844	3,255	3,7145	4,220	3,635	4,664
	북한	억\$	17.3	5.6	10.0	9.5	9.2	11.3	10.6	15.1
수입	남한	억\$	698	1,605	2,612	3,094	3,569	4,353	3,231	4,252
	북한	억\$	24.4	14.1	20.0	20.5	20.2	26.9	23.5	26.6
발전 용량	남한	만kW	2,102	4,845	6,226	6,551	6,827	7,249	7,347	7,665
	북한	만kW	714	755	777	782	705	750	693	697
자동차 생산	남한	만대	132.2	311.5	369.9	384.0	408.6	382.7	351.3	427.2
	북한	만대	1.3	0.7	0.5	0.4	0.5	0.5	0.4	0.4
조강 생산량	남한	만톤	2,313	4,311	4,770	4,846	5,152	5,332	4,857	5,891
	북한	만톤	336.4	108.6	116.8	118.1	122.9	127.9	125.5	127.9
시멘트 생산량	남한	만톤	3,358	5,126	4,720	4,921	5,218	5,165	5,013	4,724
	북한	만톤	613.0	460.0	593.0	615.5	612.9	641.5	612.6	627.9
비료 생산량	남한	만톤	375.2	373.0	395.0	318.3	343.3	318.8	255.8	281.5
	북한	만톤	88.9	53.9	45.0	45.4	40.5	47.9	46.6	45.9
도로 총연장	남한	천km	56.7	88.8	102.3	102.1	103.0	104.2	105.0	105.6
	북한	천km	23.0	23.6	25.5	25.5	25.6	25.8	25.9	26.0
선박 보유	남한	만톤	711	615	872	1,180	1,393	1,471	1,392	1,427
	북한	만톤	54	85	90	90	80	86	84	80

자료 한국은행(www.bok.or.kr)

협력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협력 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인적, 물적 교류 및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형태, 방법, 조건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대부분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재정적자폭의 확대와 복지예산 등의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하면 당분간 통일비용에 대한 정부재원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증대와 FTA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은 통일비용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에 있어서의 목표수준이나 추정모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라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다시 말해 통일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어느 정도로 달성할 것인가에 따라 통일비용은 매우 차이가 나게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게 추정되고 있는 통일비용도 현재 우리나라가 조성해 놓고 있는 기금의 규모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금을 가지고는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거의 대부분을 경제 분야가 아닌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경제의 활력 증대를 통해 통일비용

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으로의 활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비용은 통일편익이 고려되지 않으면 항상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따라서 통일비용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도 동반되어야 한다. 통일편익이란 일반적으로 통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이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편익에는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될 때 한국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와 통일로 인한 국방비의 감축과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의 상승에 따르는 외채상환이자 부담의 경감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⁵⁾ 통일의 편익이 통일의 비용보다 더 크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이 크다고 하여 통일을 주저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사전적(事前的) 통일비용의 지출이라는 개념 하에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한 사전(事前) 대북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 한국의 FTA를 활용하여 개성공단이나 나선경제자유지대 또는 황금평·위해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현대경제연구소(2011), “통일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 수준이지만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2. 개성공단

북한과의 교역규모는 남북관계의 경색여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89년도 1,8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북한과의 교역량은 2011년 약 1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전체 교역의 99%를 점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4년 시범단지를 분양한 이후 개성공단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11월 말 현재 2005년도부터의 생산누계는 14억 7,45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가동기업수도 123개 기업에 이르고 있는 등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직접교역의 중계기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공동 경제개발을 통해 긴장완화와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이유는 물론 인력수준대비 북한의 낮은 임금, 관세의 면제에 따른 비교우위, 저렴한 물류비, 낮은 토지이용비용 및 기업소득세 등 경제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상생 공영의 성공적인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남북경제공동체의 시초를 제공하여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한 경제력 격차 완화를 통한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있다.

표 8. 연도별 남북교역현황

(단위: 1,000\$)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체	개성공단	전체	개성공단	전체	개성공단
89	18,655	-	69	-	18,724	-
90	12,278	-	1,188	-	13,466	-
91	105,719	-	5,547	-	111,266	-
92	162,863	-	10,563	-	173,426	-
93	178,167	-	8,425	-	186,592	-
94	176,298	-	18,249	-	194,547	-
95	222,855	-	64,436	-	287,291	-
96	182,400	-	69,639	-	252,039	-
97	193,069	-	115,270	-	308,339	-
98	92,264	-	129,679	-	221,943	-
99	121,604	-	211,832	-	333,437	-
00	152,373	-	272,775	-	425,148	-
01	176,170	-	226,787	-	402,957	-
02	271,575	-	370,155	-	641,730	-
03	289,252	-	434,965	-	724,217	-
04	258,039	52	439,001	41,634	697,040	41,686
05	340,281	19,794	715,472	156,943	1,055,754	176,736
06	519,539	75,943	830,200	222,853	1,349,739	298,795
07	765,346	101,179	1,032,550	339,498	1,797,896	440,677
08	932,250	290,103	888,117	518,342	1,820,366	808,445
09	934,251	417,935	744,830	522,617	1,679,082	940,552
10	1,043,928	705,268	868,321	737,588	1,912,249	1,442,856
11	913,663	908,935	800,192	788,698	1,713,855	1,697,632
계	8,062,841	2,519,208	8,258,261	3,328,173	16,321,102	5,847,381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현황(각호)

표 9. 개성공단 현황

분 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생산액(만\$)	1,491	7,373	18,478	25,142	25,647	32,332	40,185
근로자	북측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남측	507	791	758	1,055	935	804
	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현황(각호)

개성공단의 반입과 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섬유류와 전자전기제품이다. 이들 품목은 가장 기초적인 경공업제품들로서 북한이 원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의 제품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높은 임금수준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평균급여는 약 90달러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평균월급인 2,060달러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하다. 비록 이러한 수준이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기타 개발도상국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학력수준도 대부분 고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임금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는 투자 기업들의 본래 목적인 수출품목의 생산지로서의 개성공단의 활용이라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주요수출국으로는 호주, EU, 중국, 러시아, 중동, 일본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수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개성공단 생산 제품 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은 주요국과의 풀리지 않는 원산지 문제이다.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산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이나 고관세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수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미 FTA 타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built-in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협정 발효후 1년 시점에서 구성, 운영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별도 부속서만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 미국은 관련법규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마무리공정(Grading, Testing, Checking, Shredding, Peeling) 등 33종 유형을 거치는 경우 미국은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제3국 생산품도 북한산 자수, 바느질 제품, 레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품이 북한에서 첨가될 경우 원산지를 북한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해외 소비시장 확보

그림 8. 개성공업지구 전경



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 ASEAN, EFTA와의 FTA이다. 2006년 3월에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는 부속서 4B에서 HS 6단위 4,625개 품목의 개성공단 및 북한 내 공단 생산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한국산으로 인정(ISI방식)하여 관세철폐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에 발효된 한-EFTA FTA는 역외가공 방식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HS 6단위 267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고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주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품목은 HS 39류(플라스틱 및 그 제품), HS 62류(메리야스 등), HS 61류(편물 및 의류 등), HS 85류(전기기기 등), HS 91류

(시계 및 부품) 등인데 이들 품목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예정 품목을 기초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산지 특례 인정 규정 적용대상 품목은 HS 6단위 267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상품목이 생산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일방 당사국의 영토 밖에 있는 공단과 같은 영역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이외에 남북합작사업의 진전에 의해 북한내 다른 공단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한-EFTA FTA에 따른 역내산대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편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ASEAN FTA는 역외가공 방식으로 HS 6단위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ASEAN의 최초 가입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6개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개성공단 제품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원산지 특례 인정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양측 경제장관들간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 역외(개성)투입(재료비 외에 운송비 등 제반비용 포함)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Free on board)가격의 40% 이하이고 일방당사국(한국)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총재료가치의 60% 이상인 경우 역외 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원산지 특례 인정 규정의 적용대상품목으로 ASEAN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 예정 품목(232개 품목) 중 HS 6단위 기준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ASEAN 회원국이 선정한 품목은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 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많이 선정되었고, 의류(24.8%), 시계(17.9%)의 순으로 허용한 품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한-ASEAN FTA를 통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입주 수요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생산제품 중 국내시장 반입목표가 32%에 그쳤고, 68%를 해외시장 수출에 두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투자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성공단제품을 FTA 체결국들에게 수출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에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회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주민에게 한국의 경제발전을 알리고 한국의 생활상에 대해 전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창구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에도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취

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의 노출이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으로부터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FTA를 활용한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경제에 더욱 많이 노출되게 함을 의미하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의존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FTA는 남북한 통일의 기초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FTA

WTO의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는 조항에 따르면 서로 다른 관세구역(Customs Territory) 사이에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각각 자율적인 관세 및 무역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관세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내법에 따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도 북한과의 FTA를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독립의석으로는 가입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자간의 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

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Agreement)이 아닌 약정(Arrangement)의 형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법률이나 남북교류법에 따라 현재 남북간 교역은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어 수출, 수입이 아닌 반입, 반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세의 철폐가 가장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는 FTA의 북한과의 체결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의 교역에 있어서 무관세 적용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교역대상국들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역규모가 확대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관세의 적용은 자국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에 제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러한 무관세 조치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문제삼고 다른 분야에서의 통상압력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남북간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국

제법질서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북한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있어 중국이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체결한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또는 경제협력 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 CEPA는 “하나의 중국(One China)”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⁶⁾ 따라서 한국과 북한도 이러한 형식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CEPA는 서로 다른 두 체제간의 제도적 차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간에도 서로 미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남북간의 FTA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한국과 북한 간의 경협관련 제도는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제도 전체를 통합하는 규범의 마련을 위해서도 전체 분야를 포괄하는 FTA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남북간의 교역은 대부분 대북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상업적 거래의 성격이 대부분이고 상업적 거래라 하더라도 1차 상품의 반입과 위탁가공용 섬유류 제품의 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북한 내의 시장

6) 대만과는 Agreement 형태로 체결되었다.

의 확산을 통한 통일의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간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남북경협에 통합된 청사진을 마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남북한 FTA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북한측의 반감은 있을 수도 있다.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와 체제적 이질성을 감안하면 그러한 반감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에 고집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⁷⁾ 사용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잠정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여 개방의 폭과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남북한 FTA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WTO는 원칙적으로 회원국 간의 FTA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남북한 FTA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FTA를 인정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상 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EPA 체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의사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

7) 한국은 이미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측의 FTA에 대한 반감을 고려하여 CEPA를 사용한 경험도 있음. 그러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FTA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위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수준임.

북경협을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CEPA 체결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은 이미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은 경제회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유무역에 따른 체제 동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다면 남북한 CEPA의 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처음에는 기존의 합의서들을 보완·개정하는 수준에서 실시하여 CEPA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며 이미 합의된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임을 인식시키고 흡수통일의 방안이 아니라 상호체제의 인정 하에 추진되는 약정임을 주지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WTO가 허용하고 있는 10년에서 15년까지의 관세철폐의 최대 유예기간을 활용하고 북한이 체제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분야라 여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소련의 붕괴와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라 북한의 중국경제에의 의존도 심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변화에 따라 북한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의 완화를 위해서도 남북한 CEPA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CEPA는 기존의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존의 다양한 경협합의서를 하나의 약정으로 통합하여 남북한 경협의 구체성과 통일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CEPA에는 상품교역의 무관세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무역 및 투자를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제반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간 투자보장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청산거래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등 한국의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일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CHAPTER 06

맺음말

2010년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의 청년층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FTA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북 사회간접자원에 대한 투자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의 지출, 남북한 제도의 통합비용 등은 앞에서 살펴본 FTA를 통하여 일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급진적인 통일 일수록 통일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통일비용의 감축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통일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FTA는 효과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인 소모성 비용보다 통일 이후의 중장기적인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FTA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격차의 심화는 통일비용의 부담을 확대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의 축소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FTA 정책을 남북경협 활성화의 도구로 삼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의 기업소득세는 14% 수준으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25%의 기업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이직률이 낮은 양질의 노동력이 이들 경쟁국가들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활용은 한국이 FTA 정책을 통해 수출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유리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WIN-WIN 상황을 만들어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국의 FTA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FTA를 통해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투자관계가 활성화 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직결된다는 것이 더욱 공고화 될 것이며, 따라서 남북한 통일에 대

한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의 마련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통일세의 도입이나, 통일기금으로 예산의 일부 적립 또는 복권이나 국채의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세 도입에 대한 20대에 대한 설문조사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의 66.5%가 부정적 답변을 하였다. 또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FTA 정책으로 통일비용의 절감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8) 2010년 8월 17일 MBC<손에 잡히는 경제>「유쾌한 리서치-통일세 도입 관련 조사」, 전국 20대 조사대상 2926명에 대한 설문조사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참고문헌

참고문헌

- 신동진 (2011),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64호
- 양운철 (2005),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미경제협력의 비교연구: 국익의 관점에서”, 세종연구원, 『세종정책연구』제1권 1호
- 외교통상부 (2011), “한미 FTA 주요쟁점과 대응”,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www.fta.go.kr)
- 외교통상부 (2011),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www.fta.go.kr)
- 이효원 (2009),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의 개선방안”, 통일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임수호 (2007),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 지만수 외 (2010),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No. 23

- KOTRA (2008), “개성공단제품 FTA 체결 국가별 수출시장 개척 방안”, 통일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각호)
- 통일평화연구원 (2011), 『2011 통일의식조사 결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제11호
- 한재완 (2010), 『남북무역 2009년 평가, 2010년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9, No.10
- 현대경제연구원 (2010),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통일 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10-42(통권 422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1),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월”, 『현안과 과제』11-16
- KOTRA (2011), “한미FTA가 미국의 대북무역제재에 미치는 영향”, KOTRA 북한경제정보(english.kotra.or.kr) No. 1305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각년도)
- KOCHI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2010), 『중-대만 ECF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KOCHI자료 10-010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18 북한의 의료실태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21 북한의 체육실태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23 북한의 대남전략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비매품)

발행일 2012년 3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22-88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편집/인쇄 웃고문화사 전화 02)2267-3956

